

與 “국익중심 실용외교” vs 野 “합리적 협상인지 의구심”

韓美 통상협상 타결

與 “한미 산업협력·동맹 확고해질 것
특히 농민 생존권·식량 안보 지켜내
산업혁신 지원 입법 적극 추진”

野 “협상 시한 쫓겨 많은 양보해
4500억弗 대미투자… 과도 금액
비관세 장벽협상 구체적 언급 없어”

여당은 31일 한미통상협상 결과를 두고 “국익중심 실용외교”에 성공했다며 자화자찬했다. 반면, 야당은 경쟁국의 대미 협상과 비교했을 때 우려했던 점이 많으며 합리적인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미 통상협상 결과를 두고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는 옳았다”며 고평가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며 “특히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어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7월 국회에 남은 5일을 민생개혁입법 2차 슈퍼워크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한국에 8월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가 15%로 낮아졌다”며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 역시 15%로 낮았다. 일본 및 EU(유럽연합)와 같은 수준에서 타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최혜국 대

우를 약속 받았다. 이로써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들과 동등 또는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조선업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달러와 반도체, 에너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는 분야에 대한 대미투자펀드 2000억불도 조성하기로 했다. 일본의 36% 수준”이라며 “지난해 대미 상품 무역 흑자는 일본이 694억달러, 한국이 660억달러로 비슷한 수준이란 점을 감안하면, 일본보다 덜 내어주면서도 동일한 관세 인하를 얻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자위원들은 “협상 타결로 큰 고비를 넘겼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박덕흠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A)이 체결된 우리에게 관세 15%는 새로운 도전일 수도 있다”며 “실용주의 외교 노선 아래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동안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율이 제로(0)였다. 일본은 2.5%를 적용받고 있었다”며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가 된다. 사실상 우리 자동차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리고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그리고 LNG(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달러로 4500억달러의 대미투자과 구매가 필요한 사안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소통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협상 타결을 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다행일 수 있지만, 그 조건과 규모 면에서 과연 국익을 지킨 공정한 합리적인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관세 장벽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대해서도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 의문을 자아내고 있으며, 앞으로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여지만 남겨 어느 수준까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정부가 관세 협상을 안보 사안과 연계해 ‘패키지 딜’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협상 결과에 안보 관련 합의는 포함되지 않아 협상의 지렛대 역할로 사용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2주 뒤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으로부터 주한 미군 감축 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막대한 안보 청구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外人 부동산 취득요건 강화… 국민 역차별 해소”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안정TF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개정안 마련
外人 부동산 매입·거래 정보 관리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부동산의 취득, 보유 및 양도를 단계별로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안정태스크포스(TF)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안정TF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27 정부 대출 규제에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차단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 은 여전히 아무런 장벽 없이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많은 국민이 허탈해 하고 계신다”며 “특히 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안정태스크포스(TF)가 31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부동산의 취득, 보유 및 양도를 단계별로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진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의 모습. /박태홍 기자

근 대출 규제 이후 서울에서만 외국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16.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리 국민의 신청은 16.1%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말 기준 외국인 소유 주택은 이미 10만 채를 넘어섰고, 이중 상당

수가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 더 큰 문제는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이 시장 가격을 자극하고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국민은 집 걱정에 시달리고, 외국인은 소위 노른자 땅이라고 하는 좋은 입

지에서 투기적 이익을 보는 기형적인 구조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위원장은 “해외 주요국은 이미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외국인이 미국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매도 시 매수인에 매매대금의 10%를 원천징수하고 있다”며 “또한 캐나다는 2027년까지 외국인의 대도시·인구 밀집지역 주택 매입을 금지하고 있고, 호주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이 당론법안으로 추진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거래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신설 ▲국가기관시설이나 안보관련시설 인근 토지거래 특별 관리 ▲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매입 외국인에 대한 의무 부과 등이 담길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을 합리적으로 규제·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역차별을 반드시 해소하고, 주택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권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강도 높은 6·27 대책을 발표하자, 국내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내국인에 역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을 단순신고로 허가 없이 취득 가능하고 외국인의 주택거래 관련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어 ‘이상거래’ 여부를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2024년 12월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외국인 보유 주택 10만 216호 중 서울과 경기 소재 주택이 각각 23.7%, 39.1%를 차지했다.

앞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안정TF는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를 열고 내국인과 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네거티브 규제방식’ 대전환 필요”…李 대통령, 기업 불합리 제도 수정 의지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제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31일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금지항목 외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



이 말했다.

특히 이날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

실에서 제6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들이 많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이날 타결된 것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의 약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내수 비중 확대와 수출시장 다변화 같이 필요한 조치들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기업 의 혁신과 투자에서 비롯된다”면서 “이

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야 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허용되는 것을 기제하고, 그 외에는 못하게 막았는데 요즘처럼 급변하는 세상에서는 민간 영역의 발전 속도를 공공 영역이 따라갈 수 없다”며 “사실 공공 영역이 허

용되는 것들을 다 정하게 되면 민간의 발목을 잡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면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첨단 신산업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신속하게 규제 혁신 기구를 정비해서 실질적인 규제 합리화,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서예진 기자 syj@